

# 출판계 뜯아보기

지난 6월 7일 전국민의 시선이 독일월드컵에 쏠린 가운데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2006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이하 우수학술도서) 534종을 선정·발표하였다. 비록 국민적(?) 관심은 없었지만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사업이 올해 특히 주목을 끈 이유는 지원액이 전년도 25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 데 있다.

작년엔 3427종(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발간서) 신청도서 중 10개 분야 258종의 도서가 선정된 데 비해 올해는 3,070여 종(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의 도서 중 534종이 선정되었다. 선정 출판사도 전년도 142개사보다 대폭 늘어난 258개 출판사였다.

출판계는 이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특히 우수학술도서 예산 증액은 출판계 차원에서 문광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이 향후 5년 이내로 50억 원 규모까지 증액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후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계기로 2006년 문광부 예산에 여유가 생기자 전격 시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예산증액이 전부는 아니다

가뭄의 단비, 깨진 독에 물 붓기 될 수도  
예산증액 뿐 아니라 도서관 도서 보상금제 등 시급

### 가뭄의 단비, 우수학술도서 지원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학술출판은 그야말로 고사 직전이다. 2005년 6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국출판연구소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좋은 학술 원고임에도 채산성이 약해 출판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10권 중 4권은 그렇다는 답이 나왔다. ‘신간 학술도서가 1년 이내에 70% 이상 팔린 비율’은 11.8%에 불과했고, 1년 평균 판매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응답은 78.5%에 달했다. 또 학술도서 중 번역도서의 비중도 전체의 32.0%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외국 번역서 의존율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측은 국내 필자군이 적은 탓도 있지만 외국 서적이라야 겨우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현실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우리나라의 학술전문도서출판은 태생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독서 인구 자체가 많은 데다 아카데미 독자와 대중 독자의 구별이 확실해 굳이 대중들이 학술전문서적을 찾지 않아도 아카데미 독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독서인구가 적고 그만큼 출판수요를 감당할 만한 전공자들도 많지 않다보니 학술전문도서 출판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수학술도서 지원금 증액이 이처럼 침체되어 가는 학술출판을 살릴 수 있

는 대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선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단기적, 일회적인 정책지원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 출판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해 도서관에 보급하는 사업이 출판사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가뭄의 단비처럼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술도서 출판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회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예산증액 불구, 해소되지 않는 불신

그동안 우수학술도서에 제도운영에 대한 불만은 심사위원의 자질과 심사기준, 충분한 심사일정 등이었다. 올해도 문광부 홈페이지에 우수학술도서 공고가 나자 '김기현'이라는 이름의 한 출판인은 "역시 금년에도 선정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끼리끼리 나눠먹는 구태는 여전하고, 심지어는 남의 책을 훔내 내거나 카피한 책자가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6월 8일자 문광부 '나도 한마디' 게시판)라며 흥분하기도 했다.

물론 근거를 댄 주장은 아니지만 이러한 불신은 뿌리 깊어 결국 책을 읽어야 할 연구자로부터 '출판사에 직접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 한 대학교수는 "해마다 우수학술도서가 선정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책이 어떤 이유로 선정되었고 또 언제 도서관에 들어와 읽을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교수가 많다"며 "전반적으로 우수학술도서는 뛰어난 저술이라는 인식보다는 정부가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형식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도서관으로부터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출판 전문가는 "선진국에선 책을 구입해 도서관에 보급하는 직접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도서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문광부 선정기준은 2003년 "단순한 대학교재나 개론서를 제외시키고 학술성을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선정기준과는 달리 "올해는 우수 학술도서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채산성이 약한 학술출판의 활성화를 기하고, 출판계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소수

출판사보다 많은 출판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전년도 142개사보다 대폭 늘어난 258개 출판사에서 발행된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책의 수준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많은 출판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양극화가 아니라 출판사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게 사실이다.

#### 제도의 권위와 공신력 높여야

출판평론가 표정훈 씨는 <우수학술도서 선정 및 지원 제도에 대하여> 라는 글에서 "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간략하게라도 각 도서의 선정 이유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며 "공표한 선정 이유까지 해당 도서에 표시할 수 있게 한다면, 제도의 권위와 공신력을 높이고 해당 도서의 프로모션까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원대 부길만 교수는 "문민정부 들어와서 규제에서 진흥으로 바뀌었는데 현실적으로 지원기관과 지원을 받는 대상만 있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즉 평가 기구가 없다. 우수학술도서의 경우 도서관협의체라든가 출판진흥위원회를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선정된 책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도서 보상금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에선 찾아보기 힘든 현재의 우수학술도서 지원은 정부당국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결과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서관도서 보상금제란 어느 출판사이건 관계없이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학술과 교육목적의 과학 학술도서 신간 일체를 정부가 사서 국공립도서관, 가능하면 학교도서관에 배급해주는 제도다. 학술서의 안정적 구매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출판사-도서관 연계 출판 시스템으로 학술출판의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동원대 부길만 교수는 "대부분의 출판사는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서는 잘 팔리지 않는 학술도서 출판을 기피한다"며 "이 제도는 정부가 국공립도서관 수만명인 487부를 기본적으로 소화시켜줌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일거에 소거시키고 학술출판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양서의 보급은 물론 학문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제반 문화의 질을 동반상승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